

# 韓 밀 자급률, 3년내 6%p 올린다 고품질 품종개발·공급안정성 확보

우리나라는 밀 자급률을 오는 2027년 8%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산 밀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2% 미만에 그치는 자급률을 6%포인트(p) 이상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우리 밀의 품질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며 수입 밀과 차별화하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밀을 전문으로 제분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밀 산업 벨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 국산 밀 산업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농진청은 지난 2022년부터 5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밀 산업 벨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재 고품질 밀가루 생산 및 공급 기반이 부족한 국산 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권역별로 국산 밀 전문 제분 시설을 조성해 밀 산업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5곳은 전북 김제, 전남 구례, 경북 구미, 경남 함양, 경기 양평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2022년 기준 1.3% 수준인 밀 자급률을 2027년까지 8%까지 높이기 위해 생산, 유통, 소비가 연계된 국산 밀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경우, 정부 비축밀 구매 시 품질 순도 등 품질을 검사해 왔다. 올해부터는 제면용과 제빵용 품종별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해 품질 등급별 구매제도를 시행 중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추진 중인 권역별 제분 시설은 하루 7톤(t) 이상 제분이 가능한 중소형 규모다. 생산량이 적은 국산 밀 제분에 효율적이고, 1.5등급(회분함량 기준 0.45% 이하) 이상의 밀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국산 밀 품종 '황금알'.

/농진청

농진청, 밀 산업 벨리화 시범단지 조성 정부-김제·구례·구미 등 5곳 합작 권역별, 국산 밀 전문 제분시설 조성 지역특화 먹거리 제품개발 등 확대

가루가 생산된다. 우리나라 대형 제분 기업은 1회 제분 최저 용량으로 100톤을 요구하는 대형 제분 시설이기 때문에 국내 생산량이 적은 국산 밀 제분에는 효율성이 낮다는 게 농진청 측 설명이다.

밀가루 원료곡은 새금강, 황금알, 백강 등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고품질 밀 품종이다. 제분 시설이 들어선 지역을 중심으로 100헥타르(ha) 이상 국산 밀 재배단지를 조성해 원료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 마련에 나선다. 특히, 수입 밀가루와 경쟁할 수 있는 용도

별 고품질 국산 밀가루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해 지역특화 먹거리 제품개발, 상표화(브랜드화)로 국산 밀 수요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관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지난 4일 경북 구미 도개면을 찾아 경북지역 국산 밀 전문 제분시설 준공을 축하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또 해당 5개 시군 중소형 제분 업체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 권 청장은 "국산 밀은 생산 여건이 불안정하고, 수입 밀과 차별화한 품질경쟁력 부족으로 용도별 구분 없이 유통되면서 수요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산 밀 전문 제분 시설을 주축으로 업체와 소비자 요구에 맞는 국산 밀가루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품질을 고급화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 및 소비촉진 방안 모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한화오션 노동자 올해만 5명 사망사고

고용부, 지난 2월 특별감독 결과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올해 초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화오션에서는 올해만 총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의원이 6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한화오션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월 26일~3월 8일까지 총 9일 동안 특별감독 후 61개 조항 법 위반사항을 적발, 과태료 2억 6555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법 조항 위반 건수는 시정조치 44건, 사법조치 46건, 과태료 15건, 사용금지 2건이다.

고용부 특별감독은 1년간 3명 이상 사망자를 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으로 한화오션과 협력업체

102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간판 미설치 및 기준 부적정 ▲단부 등 추락 위험 장소에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사다리식 통로 부적정 ▲중량물 작업 시 정격하중 미표시 ▲방폭 구조 설계·설비 미사용 등이었다.

한화오션 회사 내 사망사고 종류는 중대재해 사망 3명, 온열질환의심 사망 1명, 원인불명 익사 1명이다. 지난 1월 12일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했으나, 지난 달 9일에도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작업 중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노위는 오는 15일 국정감사에 한화오션 측을 증인으로 소환, 사업장 안전문제와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韓, 무탄소에너지 국제 협력 강화

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FE·Carbon-Free Energy)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지난 3일 공식 출범했다. 아울러 한국이 내년도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Clean Energy Ministerial)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4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된 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CFE 글로벌 작업반 신설이 공식 발표되고, 별도의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CFE 글로벌 작업반은 무탄소에너지의 범위 등 CFE 이행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 UAE(아랍에미리트), 체코,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5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국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서 안덕근 장관은 "그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해 여러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7월 16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출범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프랑수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 "모든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기대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9월 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최초로 제안한 이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루마니아, 사우디, 캄보디아, IEA 등 10개 국가와 국제기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추석 명절 앞두고 체불임금 1290억 청산

고용부, 4457개소 기관장 현장 지도 임금체불 피해자 8522명 신속 지원 상습체불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

정부가 임금체불로부터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원과 대지급금 479억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원이 청산됐다고 6일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월 31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기관장이 매일 현장에 나가 체불상황을 점검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기관장들은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206회에 걸쳐 현장으로 나갔고,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체불임금 217억원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했다.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4457개소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해 65억원의 체불을 적발했고, 현재까지 39억원을 청산했다. 나머지 26억원은 시정지시에 따라 청산이 진행 중이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 8522명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이뤄졌다. 한시적으로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결과, 추석 명절 전에 479억원(7912명)을 대지급금으로 신속하게 지원했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로 19억원(257명)을 지원했다. 자발적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는 21억원(353명)을 용자해 체불을 청산하도록 지원했다.

고용부는 상습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도 강화했다. 경기지청은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테리어 사업자 A씨

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자 이번에는 위치추적 끝에 체포하고 구속했다. 3주의 기간 동안 압수수색도 2건 이뤄졌으며, 36건의 체포영장과 30건의 통신영장도 집행되는 등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강제수사가 46.9% 증가했다.

고용부는 강제수사 강화 기초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집중지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장관은 "취임 이후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고용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자진신고 캠페인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한 달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로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중 홍보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한다.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프랜차이즈 본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 등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기울인다.

또한, 집중 홍보기간 동안 미가입 사

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 향후에는 미가입 상태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보험가입 미신고 관련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하는 등 적극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보험사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도 나선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근로자의 보수가 기재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보험가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성립신고 의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